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보도자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보도일시	8.26일 16시 이후 사용	배포일시	2021. 8.25일(수) 배포
담당	<p><총괄>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과장 이미혜, 담당자 박완근, 이한솔 (044-200-1994, 1995, 1997)</p> <p>※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: 본문 11쪽 [참고1] 참조</p>		

청년세대 ◆ 코로나 위기 극복 ◆ 격차 해소 ◆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

-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-

*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5, 6구간 368만원 → '390만원',
 7구간 120만원, 8구간 67.5만원 → '350만원'으로 인상
 (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)

- ◆ (코로나 극복)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
 - 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(14만명)
 - ② 마음건강 바우처 1.5만명 지원(20만원×3개월)
 - ③ 코로나 졸업반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(직무교육+취업연계장려금+후학습장학금)
- ◆ (청년세대 격차해소)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
 - ①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
 (기초·차상위 520→700만, 5~6분위 368→390만 7~8분위 120만·67.5만→350만)
 - ② 주거취약청년 15.2만명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(월 최대 20만원, 1년)
 - 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·개편(2.6만명)
 - ④ 중기재직 청년 지원 강화(재직자내일채움공제, 산단교통비, 중기 전세자금 대출 일몰 연장)
 - ⑤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
 - 年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(10.4만명, 저축액의 1~3배를 정부지원),
 - 年 3,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(저축장려금 최대 4% 지급)
 - 年 5,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장기펀드(납입액의 40% 소득공제)

- ◆ (미래도약) 청년의 당당한 자립,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합니다
 - ①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 지원(청년창업펀드, 창업자금, 텍스타 보증)
 - ②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'23년까지 연장
 - ③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(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부여 최대 250만원 지원, 전역시 1천만원 수령)
 - ④ K-디지털 트레이닝·크레딧 대폭 확대(5.7만명→9.9만명)
 - ⑤ 민관협력, 청년 친화적 ESG 지원 신설(현장형 직무훈련·일경험 지원, 채용관행 개선 등)

- 정부는 8월 26일(목)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협동으로 수립한 「청년특별대책」을 발표하였습니다.
- (배경)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, 미래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 -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,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.
 - * 전년동월 대비 ▲ 대졸자 평균졸업소요기간 0.4개월 증가(4년 3.4개월), ▲ 휴학경험비율 +1.1%p(48.1%) 증가(경찰인구 청년층 부가조사, '21.5월기준)
 - 교육비·주거비 부담, 자산격차 확대는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,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
 - *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(%): 청년 2.0, 신혼부부 0.3, 일반 1.6, 고령 1.8(20년 주거실태조사)
 - ** 자산보유액 증감률(%): 29세 이하 △2.5, 30대 8.7, 40대 3.7, 50대 3.2, 60세 이상 1.6
- (추진방향)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,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「청년특별대책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 - (3대방향) 기본계획 기조하에 여건변화·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, ①코로나 위기 극복 ②격차해소 ③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
 - ① 먼저,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 - "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" 신설,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"마음 건강바우처" 신설,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② 둘째,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지원도 새롭게 도입합니다.

-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,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·주거·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③ 셋째,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도 지원하겠습니다.

-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,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,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○ (5대 분야) 일자리를 핵심으로 주거·교육·복지 등 전 분야를 균형감 있게 포괄하여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특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·관 협업모델을 구축·확산하고, IT·AI·BIO 등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대폭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

□ 이번 대책은 “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”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, 5개 분야, 8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청년특별대책 목표

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

3대 방향 5대 분야

코로나 위기 복	○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4만명+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수당 17만명 지원 ○ ① 직무교육 + ② 취업연계장려금 + ③ 후학습 장학금 고졸 청년 평가지 지원 확대 ○ 코로나블루 청년심리상담바우처(20만원*3개월) 별도 신설 15만명 지원
청년세대 내부 격차해소	○ 국가장학금 중산층까지 (~8구간, 700만원~350만원) 지원 반값등록금 실현 ○ 저소득 주거취약 청년 15.2만명 월세 특별지원(20만원*12개월, 한시) ○ ① 청년내일자축제 + ② 청년희망직금 + ③ 청년장기펀드 자산형성 지원 ○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개편 및 산업단지 근무 청년 교통비 지원 연장
미래도약 지원	○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(청년창업자금, 청년창업펀드, 태크스타보증) 지원 ○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연장 및 40년 만기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도입 ○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 매칭(250만원)으로 목돈 마련 지원(최대 1천만원)
일자리	“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 개선” (80만명+@취업지원) ① 민·관 협력, 기업고용의 인센티브 강화 ② 구직·취업·창업 등 단계별 맞춤 정책 확대 ③ 공공+민간부문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
복지	“35만명 자산형성 지원 문화누리카드 31만명 지원” ① 소득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② 취약 청년 자립 지원 강화 ③ 청년층 정신건강 및 문화생활 향유 지원
교육	“24만명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주택 5.4만호 공급” ① 취약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② 청년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 확대 ③ 내집마련 초기 부담 완화 및 지원 “56만명 등록금 부담 경감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” ① 반값등록금 실현 및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② 대학 비진학 청년 역량개발 및 취업 지원 ③ 미래 대응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
참여권	“정부위원회 20% 청년 참여 확대 및 정책 전달체계 연계 강화” ① 청년-정부 간 소통 등 정책 참여 기회 보장 ② 법령, 정책 연구 인프라 등 청년 정책 기반 강화

“청년 누구나 동등한 삶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보장”

1. 일자리 :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

- 민관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일자리 창출방안, 직업훈련 강화도 금년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.
- (수요창출형 청년일자리) 대기업·금융기관·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9월 내 정부내 TF를 구성, “기업과의 민·관 협업모델”을 구축하여 참여기업·단체 확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.
- 주요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·훈련 후, 기업 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병행할 계획입니다.
- (교육·직업훈련 시스템 정비)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·AI·디지털분야, 그린·BIO 분야 등의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.
- 관계부처(기재부, 교육부, 과기부 등)와 협력하여 신기술분야 기업주도·정부지원 방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.
- (기술창업 활성화) IT, AI, 블록체인, 에너지 등 미래비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- “창업 전 → 창업 및 사업화 → 재도전” 등全주기에 걸친 창업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, 사회적으로 성공한 벤처기업가 멘토링 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- 민간기업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,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- (일자리도약장려금)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(年 최대 960만원, 14만명)을 신설하고

- (청년친화형 기업 ESG) 민·관 협업을 통한 “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”을 새롭게 추진하여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·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
- (중기 취업청년 지원)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·교통비·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하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,
 - * ①재직자내일채움공제(15.5만명, 누적), ②산단 청년교통비 지원(月 5만원, 14만명)
③중기전용 전세자금대출(1억원, 年 1.2%), ④소득세 5년간 90% 감면
- (창업 3대 패키지) 청년이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 - * ▲(창업 초기) 생애최초 청년 사업화 지원,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등
▲(창업 후) 청년 창업기업 전용 ‘테크스타 보증’,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
▲(재도전) 청년 재창업자 전용 ‘청년 다시-Dream 프로그램’
- (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)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확대(15만→17만),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구직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이겠습니다.
- (청년고용 세액공제 확대) 고용증대 세액공제(청년고용 1인당 500~1300만원 공제)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청년고용을 늘리겠습니다.
- 이외에도 ❶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, ❷스마트팜 등 농업분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청년의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* ❶지역청년 2.6만명 취업 지원 및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개편(지역혁신, 상생기반대응, 지역포용)
❷임대형 스마트팜 3개 추가조성 영농교육(20개월 +100명) 및 영농정책지원(3년간 최대 월100만원 +200명) 확대

일자리 분야 일반과제

과제명	개선내용	비고
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	▲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구직인센티브 제공 ▲ 지원인원 확대 : 21년 5천명 → 22년 7천명	확대
취업·코칭 솔루션 지원	▲ 기업 인력풀을 활용, 취업상담, 채용코칭·멘토링 제공	신설

2. 주거 :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

-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- (월세 지원 신설)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청년*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月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 (15.2만명)하는 월세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.
- *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% &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% 이하
- (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)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(중위소득 45→46%),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(출생일→출생연도)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 (최대 32.7만원)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- (청년 월세대출 확대)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상향(연 2천만→5천만)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,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.
- (청년주택 공급)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'22년에 청년주택 5.4만호를 공급하는 등 '21~'25년 총 24.3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.
- 이외에도, ①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(~23년말) 및 소득기준 완화(연 3,000만→3,600만), ②행복주택 제도개선 등 청년 입주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.

* ① 年 최대 3.3% 우대금리 지원,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지속
 ② 계약금 인하(10→5%), 재청약 요건 완화(원칙금지→허용),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기간 연장(6→30년) 등

주거분야 일반과제

과제명	개선내용	비고
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	▲ 청년·신혼부부 대상, 최대 40년 고정금리,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→ 상환부담 완화	신설
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* 연소득 7천만원이하 무주택 청년	▲ 공급규모 제한(4.1조원) 폐지 ▲ 1인당 대출금액 확대(7천만원→1억원)	확대
청년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	▲ 비주택 리모델링,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 확보를 통한 불법 방조개기 집중 단속,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이주정책 지원	개선
주거상담·서비스 제공	▲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 연계→"찾아가는 주거상담·교육" 제공	개선
주거정보 플랫폼 개선	▲ 입주희망지역 임대주택 모집 실시간 알림서비스 시·군·구 단위로 확대	개선

3. 복지·문화 :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, 마음건강·문화지원

-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과 더불어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.
- (자산형성)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(~연소득 2400만원, 10.4만명), 청년 희망적금(~3600만원) 출시·비과세,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(~5,000만원) 신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.

지원 대상 및 상품	지원혜택	납입한도	만기수령금
연소득 2,400만원 이하* 【청년내일저축계좌】	저축액(월 10만원) 정부가 1~3배 매칭	연 120만원 (3년만기)	(3년후) 720~1,440만원
연소득 3,600만원 이하 【청년희망적금】	저축장려금 최대 4% (1년 2%→2년 4%) 지급	연 600만원 (2년 만기)	(2년후) 1,200만원 + 시중금리+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
연소득 5,000만원 이하 【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】	펀드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	연 600만원 (3년후) 1,800만원 + 펀드수익 + 3년간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	(3~5년)

- (마음건강바우처 신설) '코로나블루'에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(월 20만원, 3개월)를 신설(1.5만명)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도 챙기고자 합니다.
- 그 외에도 ①전역시 최대 1,000만원 목돈마련 지원 등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, ②모든 기초·차상위 청년에게 문화누리 카드(10만원)를 발급하여 저소득 청년의 문화향유권도 보장하겠습니다.

* ①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(최대 250만원 지원→전역시 1,000만원 형성),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(4.7→6.2만원, 43만명), 군장병 역량개발 지원(자기개발비 1년 12만원, 수강료 지원비율 50~80% 확대)
 ② 만19~3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

복지·문화분야 일반과제

과제명	개선내용	비고
햇살론 유스 확대	▲ (21년) 2,330억원→(21년 추경) +1,000억원	지속
근로장려금 지원대상 확대	▲ 소득상한 인상 : 1인가구 2000만원 → 2,200만원	확대
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강화	▲ 보호연장 연령 상향 : 만 18세 → 만 24세 ▲ 자립지원 전담인력: (21) 8개 시도, (22) 17개 시도, 120명 국비지원 ▲ 자립수당: (21) 보호종료 3년내 8,035명 → (22) 5년내 9,982명 ▲ 주거지원 등: (21)10개 시도, 377명 → (22)17개 시도, 1,000명 이상	확대/ 신설
취약청소년 자립지원 강화	▲ 시설퇴소 청소년 : 주거지원 강화(임대주택 우선 입소 확대) ▲ 청소년 부모 : 맞춤형 서비스 제공(지역자원 연계, 생활도움·법률 구조 서비스 등) ▲ 학교 밖 청소년 : 예비학교→직업훈련+특화프로그램→ 취업 지원 단계별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	확대/ 신설
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	▲ 추가아동양육비 지급기간 연장 : 8개월 → 12개월 ▲ 지원인원 확대 : '21년 1.5만명 → '22년 2.1만명	확대 확대

4. 교육 :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

- 청년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, 고졸 청년의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와 더불어 미래 대응형 맞춤형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.
- (반값등록금 실현) 서민·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~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*하고 기초수급·차상위 가구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겠습니다.

*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: 4인 가구 기준증위소득 200% 이하

* 국가장학금 규모(조원) : ('21) 4.0 → ('22) 4.7(+0.7)

장학금 지원단가(만원)

구분	기초· 차상위	1구간	2구간	3구간	4구간	5구간	6구간	7구간	8구간
4인가구 기준증위소득 대비	-	~30%	~50%	~70%	~90%	~100%	~130%	~150%	~200%
'21년	I 유형	520	520	520	390	368	368	120	67.5
	다자녀	520	520	520	450	450	450	450	450
		↓							
'22년	I 유형	700 (둘째 전액)	520	520	390	390	350	350	
	다자녀	첫째, 둘째 700 (둘째 전액)	520	520	450	450	450	450	
	셋째이상	전액	전액	전액	전액	전액	전액	전액	전액

- (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확대)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(2.9만명)하고, 취약계층 학생(5.7만명)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
- (직업계고 패키지 지원) ①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(1,050명), ② 취업연계 장려금(500만원) 지원, ③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(1.2만→1.5만) 등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- 더불어 SW, 규제과학·의약·바이오,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강화*하겠습니다.

* ① (ICT.SW) SW 중심대학(41→44개), 이노베이션아카데미(500→750명) 운영 확대
 ② (의약·바이오) 규제과학대학 지정 확대(5→8개)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(100→170명), 첨단바이오 안전관리 인력(50→60명) 양성 확대
 ③ (관광)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인원 확대(100→700명), 미래관광인재 교육센터 조성 등

5. 참여·권리 :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 및 전달체계 개편

- 청년의 삶을 청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-청년 간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
- (청년참여 확대)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지정하는 동시에, 청년 공론화장* 운영(반기)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가겠습니다.
 - * 청년이 공론화 의제 발굴·제안 → 공청회, 세미나 등을 통해 선정의제에 대한 해법 모색 → 도출된 의견 정책 반영
- (법령 체계화) (가칭)「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정,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*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.
 - * 예: 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20세→19세,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
- (청년정책 전달체계 재정비)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,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청년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.
- 이외에도,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,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 기획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◇ 향후 계획

-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법령개정,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며,
-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'22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앞으로도, 청년공론화장 운영,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<참고> 1. 부처별 담당자 연락처
 2. 대상별 정책지원 내용

참고 1

부처별 담당자 연락처

담당부서	담당자 및 연락처
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	과장 이미혜, 담당자 박완근, 이한솔 (044-200-1994, 1995, 1997)
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	과장 송진혁, 담당자 원종혁 (044-215-8510, 8515)
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	과장 장미란, 담당자 김홍오 (044-203-6883, 6764)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	과장 남석, 담당자 임나리, 채정민 (044-202-4420, 4423, 4428)
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	과장 김영배, 담당자 백선경 (02-748-6630, 6635)
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	과장 황기연, 담당자 강준엽, 지소영 (044-205-1401, 1402, 1405)
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	팀장 방진아, 담당자 정유진, 이준규 (044-202-2391, 2392, 2394)
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	과장 최봉순, 담당자 이경진, 임용호 (044-201-1711, 1723, 1722)
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	과장 김재준, 담당자 권태성, 고두옥 (044-203-4220, 4227, 4221)
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	과장 김충환, 담당자 김효리, 조수연 (044-202-3370, 3408, 3367)
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	과장 이지영, 담당자 김송이, 이정미, 박상호 (044-202-7440, 7417, 7444)
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	과장 최문선, 담당자 이준호 (02-2100-6061, 6062)
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	과장 김명준, 담당자 최두현 (044-201-4504, 4722)
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	과장 정기환, 담당자 정아봉, 박윤식 (044-204-7440, 7445, 7449)
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	과장 흥성기, 담당자 김영근, 변후정 (02-2100-2630, 2642, 2636)
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	과장 김남두, 담당자 황민아 (044-200-7111, 7112)
식품의약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	과장 김현정, 담당자 최규호, 김규서 (043-719-1406, 1414)
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	과장 김준경, 담당자 오세진 (042-481-5258, 8593)

참고 2

대상별 정책지원 내용

	정책지원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
청년고용 기업	<p>①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: 1인당 年 960만원 인건비 지원</p> <p>② 고용증대세액공제 :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일정금액 세액공제(3년간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 colspan="2">중소기업(3년간)</th> <th colspan="2">중견기업(3년간)</th> <th colspan="2">대기업(2년간)</th> </tr> <tr> <th>수도권</th> <th>수도권 외</th> <th>수도권</th> <th>수도권 외</th> <th>수도권</th> <th>수도권 외</th> </tr> <tr> <td>1,100만원</td> <td>1,300만원*</td> <td>800만원</td> <td>900만원*</td> <td>400만원</td> <td>500만원*</td> </tr> </table> <p>* '21~'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</p> <p>③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: 1인당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100% 공제(2년간)</p>						중소기업(3년간)		중견기업(3년간)		대기업(2년간)		수도권	수도권 외	수도권	수도권 외	수도권	수도권 외	1,100만원	1,300만원*	800만원	900만원*	400만원	500만원*
중소기업(3년간)		중견기업(3년간)		대기업(2년간)																				
수도권	수도권 외	수도권	수도권 외	수도권	수도권 외																			
1,100만원	1,300만원*	800만원	900만원*	400만원	500만원*																			
중소기업 취업자	<p>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: 5년간 약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</p> <p>② 중기재직자 임차보증금 대출 : 한도 1억원, 금리 연 1.2%(고정)</p> <p>③ 산단 중기재직자 교통비 지원 : 월 5만원(年 60만원)</p> <p>④ 내일채움공제 성과보상기금(기업기여금) 소득세 감면 (중소 90%, 중견 50% 감면)</p> <p>⑤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근로소득세 90% 감면(5년간)</p>																							
구직청년	<p>① 국민취업지원제도(유형)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×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</p> <p>② 청년도전지원 사업 :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 인센티브 지원</p> <p>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: 취업 성공시 150만원 지원</p> <p>④ 국민내일배움카드 : 5년간 300~500만원 교육비 지원 (대기업, 공무원, 사립교원 등 제외, 모든국민 대상)</p> <p>⑤ K-디지털 트레이닝 : 디지털 분야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(22년 2.9만명)</p> <p>⑥ 일경험 프로그램 :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(1만명)</p>																							
창업청년	<p>①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: 1억원, 선배 창업가 멘토링, 세무·회계 교육</p> <p>② 테크스타 보증 지원 : 보증한도 6억원, 보증료 : 5억원까지 0.3% 고정</p> <p>③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: 생계형 창업의 경우 수도원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100% 소득세·법인세 감면(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간 50%)</p> <p>④ 청년 다시-Dream 프로그램 :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자금(6천만원), 멘토링</p>																							

정책지원 내용	
기초 차상위청년	<p>① 청년내일저축계좌 : 정부매칭 1:3 지원으로 3년후 1440만원 형성 (본인 360만원 + 정부지원금 1080만원)</p> <p>② 국가장학금 지원 단기 인상 : 기초.차상위 520만원→700만원</p> <p>③ ICL 무이자 지원 확대 : 생활비 무이자 → 재학중 학비·생활비 무이자 대학원생도 생활비·재학중 학비 무이자</p> <p>④ 문화누리카드: 10만원 문화생활바우처 기초.차상위 100% 지원</p> <p>⑤ 햇살론 Youth 대출 : 연 1200만원(금리 : 3.6%(보증료 포함))</p> <p>⑥ 독립거주 20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: 급여 최대 5.5% 인상(1급지 기준)</p> <p>① 중위소득 60% 이하 : 청년 월세 한시 지원(최대 月 20만원×12개월) * 소득기준 : 가구소득 기준중위 100% & 본인소득 기준중위 60%</p> <p>② 연소득 2200만원(1인가구 기준) 이하 : 근로장려금 지원(최대 月 150만원) * 30대 미만 청년도 가능</p> <p>③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: 정부매칭 1:1 지원으로 3년후 720만원 형성</p> <p>④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햇살론 Youth 대출 : 연 1,200만원(우대금리 적용) * 만34세 이하 대학생·미취업청년·사회초년생(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) * 사회초년생 4.5%, 대학생·미취업청년 4.0%, 취약 청년 3.6%(보증료 포함)</p> <p>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<p>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: 우대금리, 이자소득 비과세 * ▲ 우대금리 : 연 6백만원까지 최대 3.3% 우대금리(5천만원 한도) ▲ 비과세 : 연 600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(5백만원 한도) ↳ 총급여 3,600만원 이하 / 종합소득금액 2,400만원 이하</p> <p>② 청년희망적금 : 저축장려금 최대 4%(^{1년}2%→^{2년}4%) 지급 ⇒ (2년후 1200만원+시중이자+저축장려금 36만원)</p> <p>⑥ 연소득 5000만원 이하 <p>① 보증금 및 월세 대출지원(20만원까지 무이자)</p> <p>②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: 펀드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 ⇒ (3년후 1800만원+펀드수입+소득공제 720만원)</p> </p></p>
저소득층 (일정소득 이하)	<p>① 현장실습 수당 : 월 60만원(국고) × 2개월</p> <p>②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 : 1,050명</p> <p>③ 취업연계 장려금 : 취업시 500만원 지원</p> <p>④ 후학습 장학금 전액 지원 :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, 대기업·비영리기관 재직자 등록금 50% 지원</p>
직업계고 재학·졸업생	<p>①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지원 : 정부매칭 3:1 지원으로 만기시 1,000만원 형성 (본인 720만원 + 정부지원금 250만원 + 이자)</p> <p>② 자기개발비(도서구입비, 시험응시료, 강좌수강료 등) 지원 : 연 12만원</p> <p>③ 온라인 학점취득 지원(수강료 지원) : '21년 수강료 50% → '22년 수강료 80%</p> <p>④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: '21년 4.7만원 → '22년 6.2만원</p>
장병	